모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에 따른 국가 유형별 일·가족양립 정책 특성 비교

A Comparison of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in 33 Count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Maternal Employment Rates and Total Fertility Rates

송민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 속에 긴축 정책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특히 모의 취업을 지원하는 일·가족 양립 정책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1] 일·가족 양립 정책은 여성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위험을 해소해 주는 휴가 정책과 모의 취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보완해 주는 보육 정책을 포함하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확대를 '적극적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새로운 모델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파악한다. 즉, 고용 불안과 저임금 노동이 일상화된 후기 산업사회에서 전통적인 소득보장 방식이 아닌 개인의 소득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새로운 시도의 중심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위기에 처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대안을 구현하고자 하는 일·가족 양립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2]

이러한 맥락에서 일·가족 양립 정책의 목표는 재생산 위기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즉 모의 취업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혹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Ferragina, E. and M. Seeleib-Kaiser(2014), Determinants of a Silent (R)evolution: Understanding the Expansion of Family Policy in Rich OECD Countries, Social Politics 22(1), pp.1-37.
2) 장지연·신동균 외(2014), 적극적 복지국가와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pp.1-16; Hausermann, S.(2013), "The Politics of Old and New Social Policies," in Bonoli and Natali(eds.), The Politics of the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pp.111-132.

그러나 일·가족 양립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국가가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고는 일·가족 양립 정책을 실시 중인 국가들을 모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로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환경 및 주요 특징을 비교해 봄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정책 환경에 관해서는 일·가족 양립 정책의 결과가 각국이 처한 노동시장 구조와 젠더 레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3]을 고려하여 여성 취업자의 시간제근로 비율, 부부 가구의 소득자 유형 분포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일·가족 양립 정책의 자체 특성으로는 부모휴가[4] 기간 및 급여 수준, 휴가제도의 유연성, 아빠의 휴가 사용 장려 방안, 휴가제도와 보육제도 간의 연계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구축한 OECD Family Database(FD)[5]를 중심으로 수집되었다. OECD FD에는 35개 회원국과 6개 비회원국의 엄마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와 아빠에게 할당된 유급휴가의 기간 및 소득대체율 등 부모휴가제도에 관한 정보가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담겨 있다(관련 지표 PF2.1. Parental leave system). 이 41개국 중 법정 부모휴가제도가 없는 1개국(미국)과 모의 취업률 정보를 구할 수 없었던 7개국(크로아티아, 일본, 한국, 몰타,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을 제외한 33개국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가족 양립 정책 및 정책 환경, 정책 결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33개국은 다음과 같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상 알파벳순).

또한 본 연구는 국제휴가정책연구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가 발간한 11차 보고서[6]로부터 부모휴가제도에 관한 정보를 추가 수집하였다. INLPR는 2005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부

3) 장지연·신동균 외(2014), 위의 책, p.15.
4)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휴가에는 크게 모성휴가(maternity leave), 부성휴가(paternity leave), 육아휴직(parental leave), 돌봄휴가(home care leave 혹은 childcare leave)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4가지 휴가를 총칭하여 '부모휴가'라고 부르기로 한다.
5)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6.8.4. 인출.
6) Moss, P.(2015),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5 (http://www.leavenetwork.org/에서 2016.8.4. 인출).

모휴가 정책 및 관련 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2015년에는 총 38개국의 가구 단위 부모휴가 기간, 아빠 할당 휴가 기간, 부모휴가 제도의 유연성, 보육서비스와의 연계성 등에 관해 11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 중 본고의 분석 대상과 중첩되었던 국가는 총 28개국[7]이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본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밖에 세계은행(World Bank)[8]과 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9] 웹사이트에서도 정책 환경에 관한 정보 중 일부를 수집하였다.

3. 모의 취업률 및 합계출산율에 따른 국가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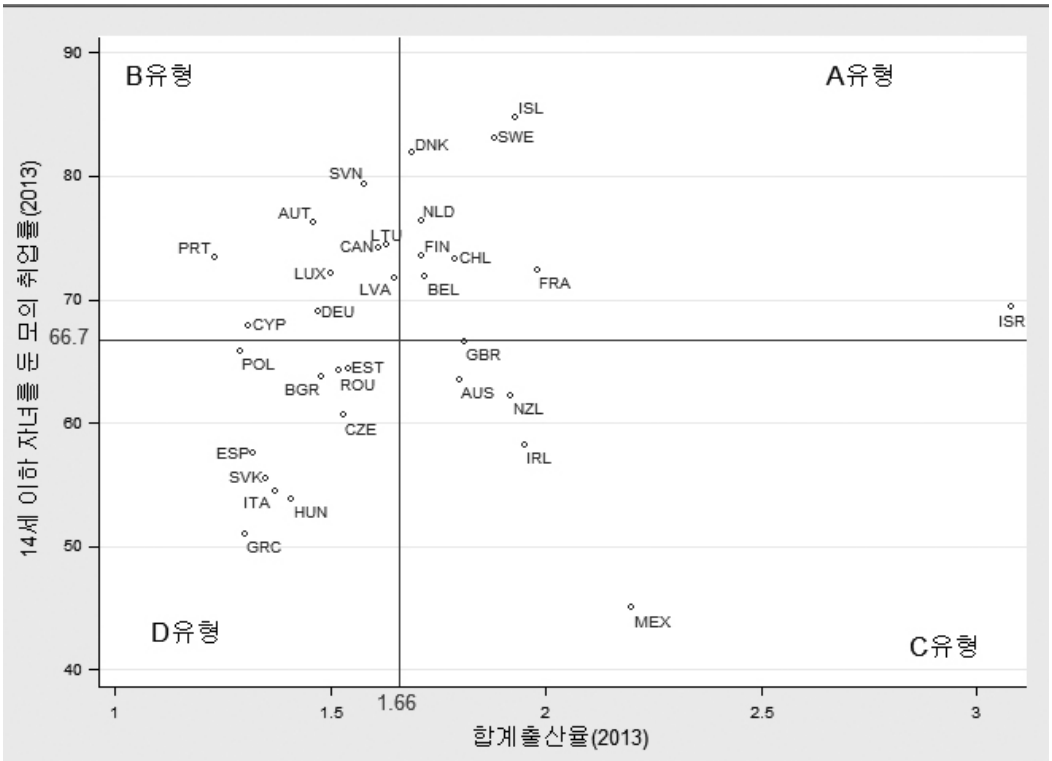
분석 대상 33개국의 2013년(혹은 최근 연도) 14세 미만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전체 평균은 66.7%, 2013년도 합계출산율 전체 평균은 1.66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국가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내고, 유형별 모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 관련 정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A유형은 모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은 나라로 정의하고 북유럽 4개국(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서유럽 3개국(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중남미 1개국(칠레), 중동 1개국(이스라엘) 등 총 9개국을 포함하였다. A유형의 2013년(또는 최근) 14세 이하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은 평균 76.3%, 1998년 이후 상승 폭 평균은 3.19% 포인트로 조사되었다. 분석 대상 33개국 중 2013년 모의 취업률이 80% 이상이었던 상위 3개국(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이 모두 여기 해당하였으며, 1998년 이후 상승 폭은 특히 네덜란드(11.6% 포인트)와 벨기에(7.7% 포인트)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유형의 2013년 합계출산율은 평균 1.94로 집계되었는데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칠레 등 5개국에서는 1.8 미만이었던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3.0 이상으로 국가 간 편차가 큰 편이었다. 1970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1970~1995년에 분석 대상 33개국 모두에서 하락하였으나 1995~2013년에는 하락과 반등이 공존하여 전체 평균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A유형에서도 1970~1995년에 평균 0.7만큼 하락하였으나 1995~2013년에는 칠레에서 0.56만큼 추가 하락한 반면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등 5개국에서 반등하여 유형 평균의 변화는 없었다.

7) 본고의 분석 대상 33개국 중 INLPR 11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5개국은 다음과 같다: 불가리아, 칠레, 키프로스, 라트비아, 루마니아.
8)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16.8.4. 인출.
9) http://hdr.undp.org/en/composite/GII에서 2016.8.4. 인출.

그림 1. 모의 취업률(Maternal Employment Rates) 및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s)에 따른 국가 유형 분류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 분류 기준 · 2013년 14세 이하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MER) · 2013년 합계출산율(TFR)	A유형 (9개국) MER와 TFR 모두 평균 이상	B유형 (9개국) MER 평균 이상, TFR 평균 미만	C유형 (5개국) MER 평균 미만, TFR 평균 이상	D유형 (10개국) MER와 TFR 모두 평균 미만
해당 국가명	벨기에(BEL), 칠레(CHL), 덴마크(DNK), 핀란드(FIN), 프랑스(FRA), 아이슬란드(ISL), 이스라엘(ISR), 네덜란드(NLD), 스웨덴(SWE)	오스트리아(AUT), 캐나다(CAN), 키프로스(CYP), 독일(DEU), 라트비아(LVA), 리투아니아(LTU), 룩셈부르크(LUX), 포르투갈(PRT), 슬로베니아(SVN)	호주(AUS), 아일랜드(IRL), 멕시코(MEX), 뉴질랜드(NZL), 영국(GBR)	불가리아(BGR), 체코(CZE), 에스토니아(EST), 그리스(GRC), 헝가리(HUN), 이탈리아(ITA), 폴란드(POL), 루마니아(ROU), 슬로바키아(SVK), 스페인(ESP)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표 1. 국가 유형별 모의 취업률 및 합계출산율 특성

		A유형 (9개국)	B유형 (9개국)	C유형 (5개국)	D유형 (10개국)	전체 (33개국)
모의 취업률[2)3)]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의 취업률 평균 (1998년 또는 최고, %)	73.48	68.13	55.53	57.84	64.56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의 취업률 평균 (2013년 또는 최근, %)	76.31	73.15	59.11	59.10	67.63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의 취업률 변화의 평균(1998~2013년, %p)	3.19 (8)	5.02	3.58	1.26	3.16 (32)
	막내아가 0~2세인 모의 취업률 평균 (2013년, %)	66.08 (8)	65.99	50.73 (4)	37.44	54.83 (31)
	막내아가 3~5세인 모의 취업률 평균 (2013년, %)	74.79 (8)	72.60	54.49 (4)	61.39	67.21 (31)
	막내아가 0~2세인 모와 3~5세인 모의 취업률 차이의 평균(2013년, %p)	8.71 (8)	6.62	3.76 (4)	23.95	12.38 (31)
합계 출산율	합계출산율 평균(1970년)	2.64	2.26 (8)	3.81	2.30 (8)	2.64
	합계출산율 평균(1995년)	1.94	1.50	2.07	1.35	1.66
	합계출산율 평균(2013년)	1.94	1.49	1.94	1.41	1.66
	합계출산율 변화의 평균(1970~1995년)	−0.70	−0.83 (8)	−1.74	−0.95 (8)	−0.97 (30)
	합계출산율 변화의 평균(1995~2013년)	0.00	−0.01	−0.13	0.06	0.00

주: 1)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된 국가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국가 수를 따로 표시함: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1970년 합계출산율 정보 없음); 호주, 아이슬란드(막내아 연령대별 모의 취업률 정보 없음).

2) 모의 취업률은 15~64세 여성을 대상으로 집계함; 14세 이하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추출 연도: 호주(2004, 2011), 오스트리아(2005, 2013), 벨기에(1998, 2013), 불가리아(2004, 2013), 캐나다(1998, 2013), 칠레(2011, 2012), 키프로스(2000, 2013), 체코(2002, 2013), 덴마크(2011, 2012), 에스토니아(1998, 2013), 핀란드(2003, 2012), 프랑스(2005, 2013), 독일(2006, 2013), 그리스(1999, 2013), 헝가리(2000, 2013), 아이슬란드(2002, 2002), 아일랜드(2006, 2013), 이스라엘(2012, 2013), 이태리(2004, 2013), 라트비아(2002, 2013), 리투아니아(2002, 2013), 룩셈부르크(1999, 2013), 멕시코(2010, 2013), 네덜란드(2000, 2013), 뉴질랜드(2000, 2013), 폴란드(2006, 2013), 포르투갈(1998, 2013), 루마니아(2002, 2013), 슬로바키아(2003, 2013), 슬로베니아(2002, 2013), 스페인(1999, 2013), 스웨덴(2005, 2013), 영국(1999, 2013); 추출 가능한 연도가 1개인 국가(아이슬란드)는 최고 연도 평균과 최근 연도 평균을 각각 구할 때는 포함하되 시점 간 변화의 평균을 구할 때는 제외함.

3) 2013년 막내아가 0~2세/3~5세인 모의 취업률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가까운 연도/자녀 연령대의 정보를 사용함: 스웨덴(2007년 정보), 이스라엘(막내아 연령을 0~1세, 2~4세로 구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스웨덴 0~2세 및 3~5세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Moss, P.(2015),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5, p. 9.

다음으로 모의 취업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합계출산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B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동유럽 3개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서유럽 2개국(룩셈부르크, 독일), 중부 유럽 1개국(오스트리아), 남유럽 1개국(포르투갈), 지중해 유역 1개국(키프로스), 북미 1개국(캐나다) 등 B유형에 속한 9개국의 2013년(또는 최근) 14세 이하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평균은 A유형보다 다소 낮은 73.2%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상승 폭 평균은 5.02% 포인트로 A유형보다 높았으며, 예외적으로 슬로베니아의 모의 취업률이 85.3%에서 79.4%로 하락하였으나 룩셈부르크에서 모의 취업률이 52.2%에서 72.1%까지 20% 포인트 가까이 상승하였고 캐나다, 키프로스, 독일에서도 7% 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B유형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이미 1970년에 2.26으로 포르투갈(2.83)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체출산율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후 1970~1995년에 평균 0.83만큼 떨어졌으나 1995~2013년에는 키프로스에서 0.72만큼의 추가 하락이 있었던 반면 독일, 라트비아, 슬로베니아에서 0.2~0.4만큼 반등하여 2013년 유형 평균은 1995년과 유사하게 1.49를 기록하였다.

B유형과 반대로 C유형은 모의 취업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고 합계출산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나라로 정의하였다. 서유럽 2개국(아일랜드, 영국),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 북미 1개국(멕시코)을 포함해 총 5개국이 여기 해당하였다. C유형 5개국의 2013년(또는 최근) 14세 이하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은 평균 59.1%였으며, 1998년 이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도하에 평균 3.6% 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1970년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 폭은 평균 1.87로 네 유형 중 가장 컸으나 이것은 다른 국가들보다 늦게 인구전환(Demographic Transition)을 경험한 멕시코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 6.72에서 2013년 2.20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었다. 2013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94로 A유형과 유사하였으나 국가별 합계출산율은 A유형과 달리 1.80~2.2 사이에서 큰 차이 없이 분포하였다.

마지막으로 D유형은 모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은 동유럽 7개국(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과 남유럽 3개국(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구성되었다. D유형 10개국의 2013년(또는 최근) 14세 이하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평균은 59.1%로 C유형과 동일하였으나 1998년 이후 모의 취업률 상승 폭은 평균 1.3% 포인트로 C유형보다 작았다. 이것은 스페인(14.6% 포인트 상승), 폴란드(4.2% 포인트 상승), 불가리아(1.9% 포인트 상승)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의 모의 취업률이 하락하거나 정체한 까닭이었다. 또한 D유형은 영유아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였다. 막내아가 0~2세인 모와 3~5세인 모의 취업률 편차가 A와 B유형에서 6.6~8.7% 포인트, C유형에서 3.8% 포인트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D유형에서는 24.0% 포인트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D유형에서 막내아가 0~2세인 모의 취업률 평균이 37.4%로 A유형(68.0%)이나 B유형(66.0%)뿐만 아니라 C

유형(50.8%)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탓이었다. 한편, D유형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970년 이미 대체출산율에 가까웠으며 1970~1995년에 1.35까지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1995~2013년 불가리아, 체코, 이탈리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스페인에서 합계출산율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41로 네 유형 중 가장 낮게 집계되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까지 1.5 이상이던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합계출산율이 2013년에는 유형 평균 이하로 하락한 것에 주목할 만했다.

4. 국가 유형별 일·가족 양립 정책의 주요 특징

다음에서는 위에서 분류한 국가 유형별로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환경 및 정책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 2〉에서는 유형별 일·가족 양립 정책 환경의 특성을 소득·분배 및 젠더 관련 지표, 성별 취업률 및 시간제근로 비율,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가구의 소득자 유형 분포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2. 국가 유형별 일·가족 양립 정책 환경의 특성

		A유형 (9개국)	B유형 (9개국)	C유형 (5개국)	D유형 (10개국)	전체 (33개국)
소득·분배 및 젠더 관련 지표2)	1인당 국내총생산(GDP/capita) 평균 (2013년, current US$)	40753.5 (8)	40944.0	37106.6	26460.8	35770.8 (32)
	지니(Gini)계수값 평균(2012년, %)	31.20 (8)	32.85	37.03 (4)	31.94	32.67 (31)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값 평균(2014년, 점)	0.10	0.10	0.19	0.16	0.13
성별 취업률 및 시간제근로 비율	15~64세 남성의 취업률 평균 (2014년, %)	73.60	70.59	75.72	67.14	71.14
	15~64세 여성의 취업률 평균 (2014년, %)	65.97	63.74	60.78	54.44	61.08
	15~64세 남성과 여성 취업률 차이의 평균 (2014년, %p)	7.63	6.85	14.94	12.70	10.06
	15~64세 취업 남성 중 시간제근로 비율의 평균(2014년, %)	11.02	7.78	12.52	4.57	8.41
	15~64세 취업 여성 중 시간제근로 비율의 평균(2014년, %)	27.10	20.70	34.48	12.15	21.94
	15~64세 취업 남성과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율 차이의 평균(2014년, %p)	16.08	12.92	21.96	7.58	13.53

(표 계속)

		A유형 (9개국)	B유형 (9개국)	C유형 (5개국)	D유형 (10개국)	전체 (33개국)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가구의 소득자 유형 분포	2인 소득자 가구	39.13	46.28	27.53	44.55	40.73
	1.5인 소득자 가구	27.29	21.25	26.26	8.43	19.85
	1인 소득자 가구	23.35	25.35	32.98	37.22	29.65
	부모 모두 무직인 가구	4.16	3.84	5.90	6.65	5.11
	기타	6.06	3.27	7.05	3.15	4.61
	합계(2013년, %)	100.0 (8)	100.0 (8)	100.0	100.0 (9)	100.0 (30)

주: 1)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된 국가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국가 수를 따로 표시함: 이스라엘(GDP/capita 정보 없음); 이스라엘, 뉴질랜드(지니계수값 정보 없음); 불가리아, 캐나다, 아이슬란드(가구 소득자 유형 분포 정보 없음).
2) 지니계수와 성불평등지수(GII)는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짐; 2012년 지니계수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정보를 사용함: 호주(2010년), 캐나다(2010년), 독일(2011년), 칠레(2013년).

자료: 성별 취업률 및 시간제근로자 비율,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가구의 소득자 유형 분포: OECD Family Database; 1인당 국민총생산(GDP/capita), 지니계수: World Bank; 성불평등지수(GII):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우선 정책의 보장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 경제 지표로서 1인당 국내총생산과 지니계수값, 젠더 관련 지표로서 성불평등지수(GII) 값의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A유형과 B유형은 모두 소득 수준과 분배 형평성, 성 평등도가 높은 편에 속하였으나 C유형과 D유형은 소득과 분배에 관해서는 대조적인 특성을, 양성 평등에 관해서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유형은 2012년 지니계수값 평균이 다른 유형에 비해 4~6% 포인트 이상 높아 분배 형평성이 낮은 유형으로 정의된 반면 D유형은 2013년 1인당 국내총생산 평균이 다른 유형의 64~71%에 불과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유형으로 정의되었다. 한편 2014년 GII값 평균은 C유형과 D유형이 각각 0.19, 0.16으로 나타나 GII값 평균이 0.1이었던 A나 B유형에 비해 사회구조의 남성 중심성이 더 높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국가 유형별 젠더 레짐의 특성은 노동시장 구조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4년 15~64세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 차이가 A와 B유형에서는 평균 6~7% 포인트였던 데 비해 C와 D유형에서는 12~14% 포인트였다. 또한 2014년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가구의 소득자 유형 분포에서 A와 B유형은 맞벌이 가구(=2인 소득자 가구+1.5인 소득자 가구) 비중 평균이 약 70%였고 1인 소득자 가구 비중 평균이 20%대였던 데 비해 C와 D유형은 맞벌이 가구 비중 평균이 50%대로 더 낮았고 주로 남성일 것으로 예상되는 1인 소득자 가구 비중 평균이 30%대로 더 높았다. 즉, 모의 취업률이 높은 A와 B유형에 비해 모의 취업률이 낮은 C와 D유형의 노동시장 구조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C와 D유형의 불평등한 젠더 레짐이 모의 취업률 향상을 저해하고 있으며, 낮은 모의 취업률로 인해 성 불평등도가 더욱 높게 측정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A와 B유형에서는 양성 평등한 젠더 레짐이 모의 취업률 향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거나 모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젠더 레짐의 성 불평등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떠한 경우든 성 평등도와 모의 취업률이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며 상호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 유형 간 합계출산율 차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취업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율, 맞벌이 가구의 구성비 차이와 연관성을 보였다.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C와 D유형은 모두 14세 이하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평균이 낮은 편에 속하였지만 C유형은 자녀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 D유형은 막내아가 0~2세일 때 모의 취업률이 평균 37.4%로 매우 낮았다가 막내아가 3~5세일 때 61.4%로 상승하였다. 일·가족 양립 정책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가족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노동시장 특성이 영유아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을 가름한다.[10] 〈표 2〉에 나타나듯 2014년 취업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율 평균은 C유형에서 34.5%로 네 유형 중 가장 높았던 반면 D유형에서는 12.2%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D유형에 속한 동구권 7개국 취업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율은 2~10%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2014년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가구의 소득자 유형 분포에도 영향을 미쳐 C와 D유형 모두 맞벌이 가구 비중 평균이 전체의 50% 중반으로 유사하였지만 C유형에서는 2인 소득자 가구 비율과 1.5인 소득자 가구 비율이 27.5% 대 26.3%로 비등했던 반면 D유형에서는 44.5% 대 8.4%로 차이가 났다. 즉, 시간제근로 비율과 1.5인 소득자 가구 비중이 높은 C유형의 합계출산율이 D유형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패턴은 A와 B유형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은 뒤에서 살펴볼 보육서비스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어서 〈표 3〉에서는 국가 유형별 부모휴가제도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였다. 우선 부모휴가제도의 보장 수준에 관해 살펴보면 부부로 구성된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주어지는 총부모휴가 기간의 33개국 전체 평균은 약 31개월이었으며, 유급휴가로 한정할 경우에는 평균 약 19개월, 소득대체율이 66% 이상인 유급휴가로 한정할 경우에는 평균 약 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의 전체 평균은 약 59주로 15개월에 조금 못 미쳤으며, 이 기간 동안 엄마가 받는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모휴가제도의 보장 수준을 국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에서 합계출산율이나 모의 취업률에 따른 특

10) Saxonberg, S. (2014), Gendering Family Policies in Post-Communist Europe : A Historical-Institutional Analysi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65.

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A유형과 B유형 사이에서 가구 단위로 주어지는 총부모휴가 기간과 유급 부모휴가 기간 평균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A유형이 더 길었지만 유급휴가의 소득대체율이 66% 이상인 기간 평균은 합계출산율이 낮은 B유형이 더 길었고, 엄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 및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평균도 B유형이 더 높았다. C유형과 D유형 사이에서는 합계출산율이 높은 C유형의 가구 단위 부모휴가 기간 평균이 합계출산율이 낮은 D유형에 속한 8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으며,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이 66% 이상인 기간은 D유형에서 평균 11개월 이상이었던 반면 C유형에서는 평균 2달 미만이었다.

표 3. 국가 유형별 부모휴가[1]제도의 주요 특징

			A유형 (9개국)	B유형 (9개국)	C유형 (5개국)	D유형 (10개국)	전체 (33개국)
부모휴가 기간 및 급여	부부로 구성된 가구에 자녀 한 명당 주어지는 총부모휴가 기간 평균(2015년, 개월)		31.63(8)	29.73(7)	15.32	41.98(8)	31.20(28)
	부부로 구성된 가구에 자녀 한 명당 주어지는 유급 부모휴가 기간 평균(2015년, 개월)		21.03(8)	15.76(7)	8.96	26.58(8)	19.14(28)
	휴가급여 소득대체율이 66% 이상인 기간 평균(2015년, 개월)		7.29(8)	8.50(7)	1.72	11.70(8)	7.86(28)
	엄마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 기간 평균(2015년, 주)		47.93	52.04	22.20	93.01	58.81
	엄마 사용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평균(2015년, %)		66.54	73.57	51.23	59.17	64.05
부모휴가 제도의 유연성	부모휴가제도 유연성 지수[3] 평균(2015년, 점)		3.75(8)	2.86(7)	2.00	2.63(8)	2.89(28)
	항목별 해당 국가 비율 (2015년, %)	시간제근로와 병행 사용 가능	62.5(8)	57.1(7)	0.0	37.5(8)	42.9(28)
		2회 이상 분할 사용 가능	62.5(8)	28.6(7)	20.0	62.5(8)	46.4(28)
		휴가 기간 늘리고(줄이고) 급여액 줄이는(올리는) 옵션 가능	25.0(8)	28.6(7)	0.0	12.5(8)	17.9(28)
		친부모가 아닌 사람도 사용 가능	0.0(8)	14.3(7)	0.0	25.0(8)	10.7(28)
		자녀가 특정 연령이 되기 전 언제든지 사용 가능	37.5(8)	57.1(7)	60.0	25.0(8)	42.9(28)
		다태아, 심각한 질병·장애 등 사유 있는 경우 휴가 연장 가능	62.5(8)	42.9(7)	40.0	50.0(8)	50.0(28)
		부모가 동시에 휴가 사용 가능	62.5(8)	57.1(7)	80.0	50.0(8)	60.7(28)

(표 계속)

		A유형 (9개국)	B유형 (9개국)	C유형 (5개국)	D유형 (10개국)	전체 (33개국)
아빠의 휴가 사용 관련 특성	아빠에게 할당된 총휴가 기간 평균(2015년, 주)	42.19(8)	39.50(7)	8.17	44.80(8)	36.19
	아빠에게 할당된 유급휴가 기간 평균(2015년, 주)	9.19	8.07	1.00	1.09	5.19
	아빠 할당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평균 (2015년, %)	56.69	56.55	32.52	79.00	59.75
	부모휴가 수급권을 개인 단위로 부여하는 국가 비율(2015년, %)	75.0(8)	71.4(7)	60.0	50.0(8)	64.3(28)
	아빠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가 비율(2015년, %)	25.0(8)	28.6(7)	20.0	12.5(8)	21.4(28)
	"부모가 균등하게 휴가를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4) 평균(2012년, %)	38.1(7)	19.5(6)	27.4(4)	17.1(5)	26.3(22)

주: 1) 부모휴가는 모성휴가(maternity leave), 부성휴가(paternity leave), 육아휴직(parental leave), 돌봄휴가(childcare leave)를 모두 포함함.
2)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된 국가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국가 수를 따로 표시함: 불가리아, 칠레, 키프로스, 라트비아, 루마니아(부부 가구 단위 부모휴가 기간, 부모휴가제도 유연성, 아빠 할당 휴가 총기간, 수급권 부여 방식, 아빠의 휴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 자료 없음); 불가리아, 칠레,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2015년 이전 엄마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 기간 및 아빠에게 할당된 유급휴가 기간 자료 없음);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루마니아(아빠의 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 자료 없음).
3) 부모휴가제도 유연성 지수는 국가별로 7가지 유연성 항목 각각에 대해 해당 사항 있는 경우 1점을 부여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필자가 직접 계산함(예: 4개의 유연성 항목에 해당 사항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유연성 지수는 4점).
4) 2012년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 포함된 "유사한 조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부부가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면 엄마와 아빠가 휴직 기간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전적으로 엄마가, ②주로 엄마가, ③엄마와 아빠가 균등하게, ④주로 아빠가, ⑤전적으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중 ③에 응답한 비율.

자료: 엄마가 사용 가능한 휴가 기간 및 소득대체율, 아빠에게 할당된 휴가 기간 및 소득대체율, 아빠의 휴가 사용에 대한에 대한 인식: OECD Family Database; 부부 가구 단위로 주어지는 부모휴가 기간, 수급권 부여 단위, 아빠의 휴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 부모휴가제도의 유연성: Moss, P. (2015),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5, pp.21-24.

사실 총부모휴가 기간, 유급부모휴가 기간, 소득대체율이 66% 이상인 유급휴가 기간, 엄마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 기간 평균은 네 가지 유형 중 모의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낮은 유형에 해당하는 D유형에서 가장 길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모휴가제도의 보장 수준만으로 합계출산율이나 모의 출산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11] 즉, 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모휴가 기간과 급여가 보장되고 있다면 실제 사업장에서 휴가 사용률을 높이

11)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합계출산율이 모든 유형에서 2.0 이상이던 1970년 엄마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 기간은 D유형에 속한 7개국 평균이 37.7주로 A유형에 속한 7개국 평균(12.7주)이나 B유형에 속한 5개국의 평균(18.6주)보다 길어 D유형 국가들이 저출산 추세에 대한 반응으로서 부모휴가제도의 보장 수준을 높인 것으로도 보기 힘들다. Saxonberg(2014)에 따르면 오히려 D유형에 속한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 전환 전 공산주의 정권하에서 '여성 해방'을 주창하며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수 도입했다가 체제 전환 후 사회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하였다(Saxonberg, S. (2014), Gendering Family Policies in Post-Communist Europe : A Historical-Institutional Analysi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37-71.)

는 것이 제도의 보장 수준 제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부모휴가제도의 사용률은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는데, Moss(2015)[12]는 부모휴가제도 유연성에 관하여 (1) 부모휴가를 시간제근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휴가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휴가 기간을 늘리고(줄이고) 급여액을 줄이는(올리는) 옵션이 가능한지 여부, (4) 친부모가 아닌 사람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자녀가 특정 연령이 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6) 다태아이거나 심각한 질병,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7)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국가별로 보고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해 해당 사항 있는 경우 1점을 부여한 후 합산하여 "부모휴가 유연성 지수"를 구성하고 국가별로 지수값을 산출한 결과, 관련 정보가 없었던 칠레를 제외한 A유형 8개국의 평균이 3.75점으로 가장 높았다. 즉, A유형은 7개 유연성 항목 중 평균 3.75개 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 시간제근로와의 병행 사용, (2) 2회 이상 분할 사용, (6) 질병이나 장애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휴가 연장, (7) 부모가 동시에 휴가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8개국 중 5개국(62.5%)이 해당 사항이 있었다. 이에 비해 B유형의 유연성 지수는 평균 2.86점, D유형은 2.63점으로 A유형에 비해 1점가량 낮았으며, A유형에서 해당 비율이 높았으나 B유형과 D유형에서는 낮았던 유연성 항목은 각각 (2) 2회 이상 분할 사용 항목과 (1) 시간제근로와 병행 사용 항목이었다.

또한 A유형 8개국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휴가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에는 휴가의 일정 기간을 아빠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하는 방안, 수급권을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부여하여 아빠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도록 하는 방안, 아빠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휴가급여를 인상해 주는 방안 등이 있다. 아빠에게 할당된 총 휴가 기간은 D유형에서 평균 44.8주로 가장 길었다. 그러나 유급휴가 할당 기간은 D유형에서 평균 1주 남짓에 불과하였던 데 반해 A유형에서 9.2주로 네 유형 중 가장 길었다. 또한 A유형 8개국 중 아빠의 휴가 사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 2개국(25%)에 불과했지만 덴마크와 핀란드를 제외한 6개국(75%)이 개인 단위로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엄마와 아빠가 부모휴가를 균등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38.1%)도 네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즉, 개인 단위 수급권 부여 방식과 아빠의 휴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덕분에 아빠의 휴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도 사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출산율이 낮은 B유형은 아빠 휴가 보장 수준이 A유형과 유사하였으나 '부모가 휴가를 균등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A유형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출산율이 높은 C유형은 아빠 휴가 보장 수준이 B나 D유형에 훨

12) Moss, P. (2015),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5, pp.21-24.

씬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휴가를 균등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이 27.4%로 출산율이 낮은 B나 D유형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즉, 설문 조사 문항 하나만으로 태도나 인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휴가를 균등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에 찬성한 비율의 국가 유형별 평균 차이는 아빠 휴가에 대한 인식이 아빠의 실제 육아 참여, 나아가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암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4〉에서는 부모휴가제도와 영유아 교육·돌봄(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서비스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모휴가가 취업 부모가 고용 불안 없이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면 ECEC는 부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모휴가 기간 종료 이후 ECEC가 시작되기 전까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부모휴가와 ECEC 각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만큼이나 일·가족 양립 정책 효과 제고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4. 국가 유형별 부모휴가[1]제도와 영유아 교육·돌봄(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서비스와의 연계성

		A유형 (9개국)	B유형 (9개국)	C유형 (5개국)	D유형 (10개국)	전체 (33개국)
ECEC 지출 규모	GDP 대비 총ECEC 지출 비중 평균(2011년, %)	1.17	0.49	0.77	0.55	0.75
공식 ECEC 서비스 이용률	0~2세 이용률 평균(2005년, %)	38.57	23.40	24.99	13.19	24.68
	0~2세 이용률 평균(2012년, %)	44.11	30.53	29.59	16.57	29.86
	3~5세 이용률 평균(2005년, %)	84.29	70.94	71.60	75.73	76.13
	3~5세 이용률 평균(2012년, %)	90.87	80.39	84.98	79.20	83.58
휴가와 ECEC 사이의 연계성	부모휴가 기간 종료 시 자녀 월령 평균 (a)(2015년)	22.71(8)	24.59(7)	15.02	35.21(8)	25.38(28)
	소득대체율 66% 이상인 유급휴가 기간 종료 시 자녀 월령 평균 (b)(2015년)	7.58(8)	7.90(6)	2.03(3)	11.01(7)	7.97(24)
	공식 ECEC 서비스 수급권이 주어지는 자녀 최소 월령 평균 (c)(2015년)	26.40(6)	35.94(5)	39.75(4)	44.40(6)	36.46(21)
	(a)와 (c) 사이 공백기 평균(2015년, 개월)	5.50(6)	16.40(5)	28.60	8.80(6)	14.38(22)
	(b)와 (c) 사이 공백기 평균(2015년, 개월)	17.33(6)	29.20(5)	38.00(3)	34.40(6)	28.21(20)

주: 1) 부모휴가는 모성휴가(maternity leave), 부성휴가(paternity leave), 육아휴직(parental leave), 돌봄휴가(childcare leave)를 모두 포함함.
2)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된 국가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국가 수를 따로 표시함: 불가리아, 칠레, 키프로스, 라트비아, 루마니아(휴가와 ECEC 사이의 연계성 관련 모든 항목에 대한 자료 없음);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슬로바키아(소득대체율 66% 이상인 유급부모휴가 수급권 없음); 호주, 캐나다, 체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공식 ECEC 서비스 수급권 없음); 불가리아, 캐나다,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2011년 보육서비스 공공지출 비중 정보 없음); 호주, 캐나다,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페인(2011년 취학 전 교육 공공지출 비중 자료 없음); 캐나다, 그리스(총ECEC 공공지출 비중 정보 없음).

자료: 공식 ECEC 이용률, GDP 대비 ECEC 지출 비중: OECD Family Database; 휴가와 ECEC 사이의 연계성: Moss, P.(2015),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5, pp.33-39.

우선 각국의 ECEC 제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ECEC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 및 공공 ECEC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았다. 지출 규모에 관해 구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 자료인 2011년 기준 GDP 대비 공공 ECEC 지출 비중은 A유형이 평균 1.17%로 가장 높았고 C유형이 0.77%로 그 뒤를 이었으며 B유형과 D유형은 약 0.5%로 A유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공식 ECEC 서비스 이용률은 2005년에 비해 2012년에 0~2세와 3~5세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 유형은 (2011년 GDP 대비 공공 ECEC 지출 비중에서와 마찬가지로) 0~2세와 3~5세 모두 A유형으로, 각각 44.1%, 90.9%의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D유형은 0~2세와 3~5세 모두에서 ECEC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았는데, 0~2세 이용률은 A유형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6.6%에 불과하였으며 3~5세 이용률도 80% 미만이었다.

한편 공식 ECEC 서비스 수급권이 주어지는 자녀의 최소 월령은 A유형이 평균 26.4개월로 가장 낮았고 B유형이 35.9개월, C유형이 39.8개월이었으며 D유형이 44.4개월로 가장 높았다. 즉, D유형이 A유형보다 공식 ECEC 서비스 수급권을 18개월이나 더 늦게 부여하였는데, 이로 인해 D유형이 A유형보다 부모휴가 수급권을 더 오랜 기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부모휴가 기간 종료 후 공공 ECEC 서비스 수급권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공백기는 A유형이 훨씬 짧았다. 구체적으로 전체 부모휴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공백기의 평균은 A유형에서 5.5개월, D유형에서 8.8개월이었으며, 소득대체율 66% 이상인 유급휴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공백기의 평균은 A유형에서 17.3개월, D유형에서 34.4개월이었다. 특히 부모휴가 기간 종료 후 ECEC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공백기가 없었던 8개국[13] 중 5개국이 A유형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휴가제도와 ECEC 서비스 사이의 뛰어난 연계성이 A유형의 합계출산율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유형과 반대로 D유형에서는 미흡한 돌봄서비스 정책이 저출산 현상 지속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선 〈표 1〉과 〈표 2〉에서 D유형은 0~2세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시간제 일자리 비중, 1.5인 소득자 가구 비율이 낮고,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가구의 소득자 유형이 1인 소득자 가구와 2인 소득자 가구로 양분되어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과 저출산 현상은 돌봄서비스 정책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Saxonberg(2014)에 따르면 D유형에 속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에서는 1990년대 체제전환기에 0~2세 탁아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이 크게 축소되었다.[14] 시간제근로와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도 없으면 여

13)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스웨덴*(*는 소득대체율 66% 이상인 유급휴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ECEC와의 공백이 없는 나라).

14) Saxonberg, S. (2014), Gendering Family Policies in Post-Communist Europe : A Historical-Institutional Analysi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59-63.

성들은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낮은 1인당 국민소득과 남성 취업률에서 암시되듯 D유형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자의든 타의든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과하는 남성 중심 사회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노동정책과 가족정책은 오히려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재편되면서 동유럽 국가 여성들은 '출산하지 않고' 일을 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자녀가 영아일 때는 '일을 그만두고' 양육하다가 자녀가 3세 이상이 되어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면 전일제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나가며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취업률이 높은 A와 B유형은 모의 취업률이 낮은 C와 D유형에 비해 GII로 대표되는 성불평등도가 낮았고, 성별 취업률 격차, 1인 소득자 가구 비중 등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구조의 남성 중심적 성격이 약한 편이었다. C유형은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모휴가제도의 보장 수준이 낮았지만 D유형은 기간과 급여 측면에서 부모휴가제도의 보장 수준이 A나 B유형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모의 취업률이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를 통해 성 평등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일·가족 양립 정책을 통한 모의 취업률 제고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는 다시 성평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A유형과 B유형 사이, C유형과 D유형 사이의 시간제근로 비율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모의 취업률이 유사한 상황에서 시간제근로 비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즉, 시간제근로는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높여 주어 여성의 취업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평등한 젠더 레짐하에서 시간제근로의 질이 전일제근로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는 (비록 출산율 제고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분배의 형평성 악화 및 여성 노동력의 주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시간제근로 비율이 가장 높았던 C유형의 지니계수와 GII값이 네 유형 중 가장 높았던 점은 이러한 우려를 강화한다.

셋째, 모의 취업률이 비슷한 A유형과 B유형의 부모휴가제도는 기간 및 급여 수준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제도의 유연성, 아빠의 휴가 사용 장려 정도,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A유형이 B유형보다 우월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에서 부모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며, 휴가 기간 종료 이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계출산율 제고(혹은 적정 수준 유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D유형에 속한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육아 책임을 여성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 및 돌봄 서비스 정책이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면 부모휴가제도의 보장 수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모의 취업률이나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모의 취업률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 본고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 관련 현황은 D유형 국가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D유형의 낮은 여성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은 남성 중심 젠더 레짐은 지속되고 있으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지속 불가능해지면서 생산체계의 위기가 재생산의 위기로 전이되었음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나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에게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 우리 사회가 재생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구조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휴가제도와 보육제도 간 연계성을 제고하여 취업 여성의 아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